



10대 그룹 재생에너지 성적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주최로 8일 오전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활동가들이 10대그룹총수의 얼굴가면을 쓰고 해당 그룹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를 들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 5개 분야 14종 공공데이터 개방

농식품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

외식소비·상권분석 데이터나 동물등록 현황, 귀농·귀촌실태 등 농식품 분야 활용도가 큰 공공데이터들이 일 반에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data.mafra.go.kr)'을 통해 실시간 도매시장경락가격과 안심식당 등 527종 데이터는 개방돼 있다.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2018년 650만건에서 2019년 2500만건, 2020년 4500만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이에 농식품부도 추가 개방할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올 상반기에는 소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할 바 있다.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되는 데이터는 농업·농촌·축산·방

역, 식품·유통 등 5대 분야 14종으로 그 간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지역별 동물등록 현황, 농약관리 현황, 곤충산업 현황 등 5종(이상 7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 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9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에 온실 및 에너지 사용 현황, 스마트팜 생육·환경 데이터 등 4종(12월), 난각(계란껍질) 표시 데이터, 재해보험 가입 데이터, 모돈(어미돼지) 이력제 데이터 등 3종(2022년3월) 순이다.

모든 이력제와 난각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등도 개방돼 가축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축방역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국민 '수소왔소 퀴즈쇼' 11일 결선

산업부, 예선통과 60명 대면행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해온 '수소왔소 퀴즈쇼' 결선을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선은 지난 4개월 간 16만명이 참가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 형식의 대면 행사가 진행된다.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케이블TV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해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는 유튜브 대도서관과 아나운서 한석준이 맡고, 방송인 김태진, 유튜브 파워튜너, 인플루언서 장지수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행사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 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하고 산업부와 SK E&S, 현대자동차,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한국중부발전, 포스코 등 6개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후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번 결선 일반부와 학생부 최종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수소전기차 넥쏘 1대를 각각 제공하며, 학생부 최종 우승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도 함께 수여한다.

한편,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1등 경품인 수소전기차를 타게 되면 전국 강연을 다니겠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예선에 참가했지만, 시간 내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선 문제는 수소에너지 기본상식과 수소 산업 생태계, 수소 정책 및 수소 산업 내 주요 동향 관련 내용의 객관식 형태 3문제씩 출제됐다.

문승욱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이번 퀴즈쇼는 수소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국민 참여형 퀴즈쇼로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수소가 청정한 미래 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역 장교, SNS서 쇼핑몰 홍보 영리행위·겸업 금지 여겨 '공분'

A중위, 의류 쇼핑몰 모델 활동 '남자옷 문의 클릭' 링크 공유도 육군 "위반여부 확인, 조취 예정"

현역 육군 장교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모부대 소속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와 모델 활동을 펼쳐왔다.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 남자옷 문의 링크 클릭"이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온라인 샵의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해당링크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A중위 자신으로 추정되는 모델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A중위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온라인 샵에는 '국방부 사제의류'로 분류한 국군 특수부대 관련 티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8일 익명의 한 장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A중위의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샵 등의 활동은 현역장교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7일 서울 국방부장관께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국민이 군을 신뢰한다'

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는 유튜브 등에 대한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이 규제 대상이며,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둔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업군인, #협찬, #문의 등의 해시태그를 걸어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간부들은 "한 차례 현역복무를 마치고 중위로 재임용한 그가 영리행위와 겸업금지 관련 규정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A 중위의 행위에 대해 "모부대 소속 간부의 SNS 계정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사이트는 개인 소유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며 "부대는 해당 간부의 SNS 계정에 대해 '국방 사이버기동통합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8일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만 됐을 뿐, 게시물들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 오히려, 온라인 샵의 홍보 인스타그램의 주소를 추가로 링크했다. 때문에 '군당국의 조치가 무리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장교 등의 해시태그를 단 사회관계망(SNS)은 남발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군인의 공무원 신분증이 전역장교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다.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공개채용 등 청년채용 위한 유인책 확대”

안경덕 고용부장관, 취업고충 청취 “청년들에 일 경험, 훈련기회 지원”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경력자 위주로 수시 채용을 늘려 취업하기 어려워졌어요.”

청년 구직자들이 8일 일자리 주무부 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공개채용 제도 활용 등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인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 공간 '마실'에서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듣고, 청년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유망 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기업에 1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인재육성사업도 1만5000명 규모로 시행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000명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재활용 불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의무화

환경부, 내년부터 개정안 적용

내년부터 플라스틱,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돼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분리배출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가 붙은 제품과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종이팩,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나 트

레이류 포장재 중 분리해 배출하기 힘들 경우 표시를 하도록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 표시가 새

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종이팩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과 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생산자는 자체적인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노력을 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